

2012년 대선 평가

낙담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각오가 필요하다

전준범 | 정책위원

박근혜 정부의 탄생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현정 사상 최초의 과반대통령, 최초의 여성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 등 많은 수식어가 붙었다.

양 후보의 정책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게다가 선거 막바지에 이를수록 이른바 3대 의혹(NLL 대화록,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댓글 알바 의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75.8%를 기록했다.

[표1] 역대 대선 투표율 및 후보 지지율

구분	당선자	2위	투표율
2012년 18대 대선	박근혜 (51.6%)	문재인 (48.0%)	75.8% (잠정)
2007년 17대 대선	이명박 (48.7%)	정동영 (26.1%)	63.0%
2002년 16대 대선	노무현 (48.9%)	이회창 (46.6%)	70.8%
1997년 15대 대선	김대중 (40.3%)	이회창 (38.7%)	80.7%
1992년 14대 대선	김영삼 (42.0%)	김대중 (33.8%)	81.9%
1987년 13대 대선	노태우 (36.6%)	김영삼 (28.0%)	89.2%

네거티브 공방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그 파급력이 약해 투표 의지를 상실

할 정도의 환멸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¹⁾ 안철수 현상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 역시 투표율에 일정 반영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선이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 양 진영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특히 보수 유권자층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1:1 구도로 치러진 첫 대선이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이인제, 이회창 등을 포괄하는 보수연합을 창출해, 1997년 이인제-김종필, 2002년 정몽준과 같은 이탈을 차단했다. 야권도 심상정 예비후보가 등록을 포기하고 안철수, 이정희 후보가 모두 사퇴함에 따라 민주통합당 주도의 민주연합을 완성했다. 양 진영의 역량을 최고조로 집중시킨 총력전에서 MB 심판론이 패배한 것이다.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 26개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세력은 완패했다. 경남도지사,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패배했고, 기초단체장 선거 3곳(인천 중구청장, 광주 동구청장, 경북 경산시장) 중 2곳에서 보수세력이 승리했다. 광역의원 2곳도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했고, 기초의원 선거 19곳에서는 새누리당 9곳, 민주당 6곳, 통합진보당 2곳, 무소속 2곳에서 각각 당선되었다. 그야말로 보수세력의 대승이다.

MB 심판론의 패배, 참여정부 심판론의 승리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기 확대된 양극화와 권위주의적 정치를 비판했고, 이에 박근혜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적 무능과 아마추어 정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대응했다. 가령 문재인이 반값등록금 시행을 미룬

1) 과거의 네거티브는 거액의 비자금 의혹, 병역 비리, BBK 의혹 등 대형 네거티브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를 비판하면, 박근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에 등록금이 폭등했다고 반박했다. 양 진영 모두 집권 기간 동안 실패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제살 깎아먹기식 책임전가 논쟁이었다.

사실 모든 국민들은 지난 10여 년 간 집권세력이 달라지더라도 민중들의 삶의 조건은 꾸준히 악화되어왔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없고, 양 진영 모두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양 진영은 과거 집권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일정한 단절과 쇄신을 꾀해왔다. 박근혜는 당명개정과 좌클릭을 시도해서 ‘이명박근혜’라는 공격으로부터 일정하게 벗어나고자 했고, 문재인은 안철수와의 새정치 선언과 친노동행보 등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문재인은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벤트의 흥행을 이뤄내지 못했고 그 결과 안철수 사퇴 후 늘어난 15-20% 정도의 중도층을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또 노동운동의 침체상황에서 친노동행보는 ‘관리’의 차원이었지 효과적인 득표전략은 아니었다. 여전히 문재인은 노무현의 적통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고, 참여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박근혜의 공격을 넘어설 수 없었다.

반면,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등 핵심 정책에서 일정한 후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확대, 복지, 정치개혁 등에 있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과오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에서, ‘준비된 변화나 무책임한 변화’라는 쟁점을 형성했다. 또 아버지 박정희의 ‘잘 살아보세’성상 신화를 등에 업고, 경제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이끌어냈다. 그 결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현직의 위기’를 돌파하는

예외적 성과를 얻었다.²⁾

민주세력의 무능의 결과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세대구성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20-30대는 줄어들고 50-60대는 증가했지만, 연령대별 지지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그렇듯 여전히 높은 지역주의의 벽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수후보가 수도권에서 패배하지 않는 한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유권자의 10.3%)과 광주·전남·전북(10.2%) 득표가 상쇄되면, 결국 부산·울산·경남(15.8%), 충청(10%), 강원(3%), 수도권(49%)에서 승부가 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구성의 변화나 여전히 강고한 지역주의만으로 MB 심판론의 패배, 참여정부 심판론의 승리, 박정희 시절 경제성장 향수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실 박근혜에 62.5%의 지지(출구조사)를 보낸 50대 유권자 층은 10년 전 노무현 지지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충북, 강원, 제주, 경기, 인천에서 모두 패배했고, 그나마 승리한 서울지역에서도 득표율 격차는 3.2%포인트 차로 매우 적었다.

중요하게 평가해야할 점은 민주세력의 무능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재벌

2) 한편 이번 대선에서 대북정책, 안보 이슈의 영향력은 매우 감소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안보위기를 자극하면 보수정당에 유리했다. 예를 들어 1996년 북한의 판문점 무력 시위 사건은 신한국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이 침몰하고 북한산 어뢰 잔해가 발견됐지만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다. 북풍보다는 역풍이 더 강하게 불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정황은 정치권이 안보 이슈를 활용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후보가 여성이고, 또 상대 후보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에 따라 선거전략 상 안보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안보 무능론', '여성 대통령 안보 불안론', '보수발 북풍' 모두 별로 제기되지 않았다.

중심의 세계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재벌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을 심화시켰고,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고용이 불안해지고,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대중적 불만은 누적되어 왔다. 이는 어떻게 보면 야권에 기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17대 대선 패배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던 친노계 정치인들은 노무현의 죽음을 계기로 일거에 정치력을 회복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적 불만에 힘입어 6.2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등을 놓고 자신들의 집권 경험에 대한 뚜렷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모순적인 입장을 남발했다.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와 한미동맹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이명박 정부만 비판하려는 이들의 전략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적 무능과 아마추어 정치에 대한 우려를 씻어 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즉, 이들은 대안세력으로 부상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2011년 민주당 지지율은 몇몇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항상 한나라당에 비해 열세였고 손학규, 유시민, 문재인 등 유력 야권주자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근혜의 지지율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만이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카드로 사고되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문재인은 내용없이 '정권교체'만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공약조차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다. 가령,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에 높은 지지율을 보인 50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은퇴 후 자산과 소득에 대한 실리적이고 전방적인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양측 모두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정년 연장, 하우스푸어 대책,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등 이들의 노후불안을 타겟팅한 세부정책에 호소하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보다 주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능한 민주세력을 뒤쫓은 민중운동

2008년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 당권을 장악한 세력은 반MB 야권연대를 내세우며 무능한 민주세력의 뒤를 쫓았다. 이들은 민주세력의 모순적 입장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2012 총대선에서 일정한 의석과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주류화의 길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 집권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동시에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통합진보당은 반MB 야권연대에 헌신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더 과격하고 원색적인 MB 비난을 자신의 역할로 상정한 듯 했다. 대선 TV 토론에서 문재인과 이정희의 역할분담은,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 내 좌파로서 할당받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무원칙한 야권연대를 비판하면서 출마한 김소연 후보와 김순자 후보는 민중운동의 독자적이고 통일적인 대응을 모색하던 여러 세력을 폭넓게 규합하지 못한 채 민중운동 내 하나의 정파로서 개별 대응했다. 양 세력은 민중운동 전반의 우경화와 분열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적 이념,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 결과 김소연 후보는 0.1%(16,687표), 김순자 후보는 0.2%(46,017표)의 표를 얻는데 그쳤다.

민중운동은 야권연대의 자장 안으로 급속히 휩쓸려 들어갔다. 민중운동이 자신의 핵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기 보다는, 야권이 설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집회에 대중조직을 동원하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그 결과 총대선을 경과하면서 민주노총 주요 산별조직들은 자기 이해에 따라 실용적으로 야권 후보와의 협약에 매진했고, 민주노총은 이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아무런 대선방침도 투쟁계획도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11월 28일 발표한 대선시기 '민주노총 조합원 3대 대중운동 지침'은 △반드시 투표하기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투표참여 보장 운동 △좋은 영화보기, 투표참여 SNS 전파 운동

이었다.

지난 5년 간 민중운동은 이명박 비판에 성공하였나

지난 시기 민중운동은 스스로의 이념적 정체성을 상실해왔다. 자연스레 지배 세력에 대한 정세적이고 근본적인 비판을 하는데도 한계를 보였다. ‘MB 쥐새끼’같은 풍자, 경제민주화에 노동의제를 하나둘 끼워 넣는데 급급한 실용주의가 근본적 비판을 대체해버렸다. 압도적 득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정부’라고 부르면서 자족적 비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가 박정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와 달리 쇄신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비판할지에 대한 논점은 박근혜를 ‘유신의 딸’, ‘공주’라고 부르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처럼 객관적 현실로부터 거리가 있고 설득력이 부족한 과격 비난과 악마화는 대중운동의 확대보다는 기존 지지층 내부의 자기위안의 의미가 강했고 따라서 대중적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다.³⁾

그런 점에서 올 대선 이명박 정부가 대중적으로 심판받지 못한 점에 대해 민중운동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 민중운동이 독자적 이념에 기반을 두고 비판과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는 한 자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없고, 나아가 대안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은 요원하다. 기껏해야 민주세력 내 좌파로 자리매김 될 뿐이다. 낙담보다는 반성이 필요한 때다.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

3) 그런 점에서 나름수 열풍이나, SNS 공간이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 평가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직선제 도입 이래 최초의 과반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대표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국회도 여대야소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친노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안철수의 신당 창당과 맞물린 이 합집산의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인수위는 물론,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운영은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다.

외교 정책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이 지속될 것이다. 박근혜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ISD의 경우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신 뒤로 미뤄뒀던 KTX 민영화, 송도 영리병원 설립 등 민영화 공세도 강행될 것이다. 국방 정책 역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다. 대북 정책에서도 박근혜는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등을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위기관리 전략이 한층 강화되는 변화도 나타날 것이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747 공약(연간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당선되었다. 성장보다는 위기극복과 중산층 복원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 임기 내에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⁴⁾ 재정건전성과 기업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⁵⁾,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복지 확대가 상징적

4) 2011년 기준 한국의 15~64세 고용률(OECD 기준)은 63.9%. 박근혜의 공약대로라면 앞으로 15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해야 한다.

5)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공공부문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 400시간 이상 단축하는 한편 임금 피크제와 연계해 정년을 60세로 연장 △공공부문 청년층 채용 확대 △청년 창업과 해외 취업 지원 △정리하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직 보호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200만 명의 고용보험·국민연금 100% 지원 등이다. 또한 IT(정보통신)·문화·콘텐츠·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

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격은 경제위기와 양극화에 따라 대중적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후반부에 내걸 수밖에 없었던 ‘공정사회’론과 총대선 국면에서 여야가 공히 제기한 경제민주화-복지국가론에 대한 일정한 수용에 기초해있다. 즉, ‘저성장시대 위기관리’가 올 대선을 거치며 형성된 지배세력 내 컨센서스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난 11월 21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 기조발제문은 세계경제가 “2008년 이전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런 조건에서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를 주장하는 “분열적인 상황을 극복”할 것을 주장한다. 다만, “분출하는 분배와 복지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버거운 저성장시대”이므로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선별적 복지의 확대, 양극화의 완화 및 개선 등이 현실적 과제로 제시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과제는 금융의 건전성 감독 강화, 적정 자본규제, 고용친화형 경제정책, 부동산가격 안정을 포함한 물가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등 거시안정화 정책에 종속된다.(안국신, 「기रो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볼 것인가?」)

그런데 미국, 유럽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성장세도 둔화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일례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코스피가 15%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전체적으로는 6.6% 하락)⁶⁾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위기가 심화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거시안정

규모 투자를 통해 신(新)산업을 창조한다는 ‘창조경제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6) 삼성전자 주식은 올해 들어 46.8%, 현대자동차는 27.4%가 올랐다. 두 회사의 주식을 제외하면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볼 때 작년 대비 3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에 증속된 일정한 분배정책은 언제든 다시 역행할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이 가진 모순으로 인해 대중의 불만은 언제든 여러 형태로 다시 분출할 수 있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세적이고 근본적인 비판과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한 태세를 갖추자

2012년 한 해 동안 진보정당의 우경화, 대중운동의 분할과 무기력이 지속되어 온 결과 현재 민중운동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박근혜 당선 직후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듯 이 어려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막막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박근혜는 인수위와 정부 초기 일정한 개혁조치를 단행할 것이고, 이는 양극화 완화, 중산층 복원, 정치개혁 등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문재인에 투표한 48% 국민과의 대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조직되어있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정책이 실질화할 것임을 예고함으로써 새 정부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중운동,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은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험난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각성이 시급하다.

운동을 재개하고 새 정부에 맞서 투쟁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선 민주노총을 재정비하고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구성된 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회가 직선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민주노총 내 세력 간 충분한 합의 노력을 바탕으로 차기 지도부를 '원칙있는 단결 지도부'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의 정파 간 세력구도 하에

서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집행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으로서 기본적인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향후 투쟁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현장과 지역에서의 혁신 노력도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이다.

동시에 현장, 지역, 산별에서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 활동가들의 새로운 결집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세우기 위해, 경제위기 하에서 정부와 자본의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고 각 산업 및 사업장, 각 지역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노조운동의 진전을 위해 각 정파 및 의견그룹들이 기존의 관성화된 노동조합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혁신해나가야 한다. 기존 정파별 구도를 넘어 무너진 현장을 복원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지역·산업별로 새롭게 결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진당 출범 이후 전통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노선적 분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 정치·사회운동의 혁신과 공조를 추구해야 한다. 각 정파, 세력 별로 취약한 영향력을 보완하고 각 지역, 부문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기 운동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